

- 지문이 길어서 체감난이도가 높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쉽게 출제되었다. 하지만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 역시 기본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2번 규제영향분석이나 5번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 10번 조직문화 중 문화의 개념, 17번 과년도 지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답이 보이지 않으며 정확히 숙지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의 키워드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예가 6번 특정평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물어본 문제가 아니라 특정평가 자체를 물어본 문제이어서 수험생들이 혼란이 야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1.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해설 : ①은 공유재의 비배제성을 의미한다. ②③④ 공유지의 비극은 과다소비와 자원고갈로 인한 공멸 현상(개인합리성과 집단합리성의 충돌)으로서 시장실패현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Hardin은 재산권의 사유화(개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여 개인이 관리)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제시하였다. 주의할 것은 국가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국가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제도의 도입(ex. 어획량 쿼터제)’이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반론으로 E. Ostrom은 사용자간 자치적 해결을 위한 규칙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⑤는 공유재의 경쟁성을 의미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36페이지) 답 : ④

2.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도구이다.
-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 ③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분석하는 도구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46페이지). 답 : ③

④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 - 2014 비타민행정학 46페이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존속기한 연장 포함)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하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보충 - 규제영향분석

1. 의의 :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2. 분석 내용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3.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퀴나와 로보그(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 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해설 : 이 문제에서 조직 외부는 조직자체를, 조직 내부는 조직 구성원을 의미한다. ④는 합리적 목표모형으로서 성장 및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합리적 계획과 목표 설정 및 평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성장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관계모형이며 자원확보를 중시하는 것은 개방체제모형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84페이지) 답 : ④

④ 경쟁적 가치접근법(Quinn과 Rohrbaugh, 1983) - 2014 비타민행정학 84페이지

- ㉠ 의의 :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가 평가하느냐,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와 관련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보는 상황적 접근이다. 즉 효과성에 대한 고정적이고 최선의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과성 개념은 주관적이고 평가자가 선택하는 목표는 가치관·선호에 근거를 둔다고 본다.

㉡ 평가모형

구 분	조 직	인 간
통 제	합리적 목표모형	내부과정모형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인간관계모형

- ㉢ 합리적 목표모형 : 조직 자체와 조직구조에서의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으로서 합리적 계획과 목표설정 및 평가를 통하여 조직의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생산성·능률성에 중점을 둔다.
- ㉣ 개방체제모형 : 조직 자체와 조직구조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서 조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자원획득 등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중점을 둔다.
- ㉤ 내부과정모형 : 조직보다는 인간을 강조하고 조직구조에서는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으로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조직의 안정성과 균형유지에 중점을 둔다.
- ㉥ 인간관계모형 : 인간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서 구성원의 사기와 응집력이 효과성을 높인다고 보고 조직 내 인적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4.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해설 : ② 시장에서의 교환은 받은 만큼 주는 등가물의 교환인 zero-sum 게임이지만,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positive-sum 게임의 특성을 지닌다.(2014 비타민행정학 95페이지) 답 : ②

2. 사회자본의 특성 - 2014 비타민행정학 95페이지

- ⑧ 파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 : 시장에서의 교환은 받은 만큼 주는 등가물의 교환이지만,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zero-sum 게임이 아니라, positive-sum 게임이므로 사용될수록 더욱 축적되고 증가된다.

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해설 : ①는 통계적 타당성이다.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②는 내적 타당성이다. 외적 타당성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을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질적 방법은 인과관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비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해석적·창의적·개인적·서술적 접근을 하며 무엇이(what), 어떻게(how)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므로 구체적인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귀납적 과정을 거치며 개방식 질문과 깊이 있는 면접을 통하여 질적 자료들을 획득한다. 반면 양적 방법은 인과관계의 발생정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얼마나 많이(how many) 있는가를 분석하므로 이론과 가설이 원인·결과의 순서에 따라 검증되는 연역적 과정을 거치며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중 하나를 채택하게 된다.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인과관계의 적합성을 분석하므로 평가의 신뢰성이 아니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신뢰성은 결과의 일관성이다. ⑤는 성과관리제의 내용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 스스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726페이지) 답 : ⑤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정기건강검진) : PART - 2014 비타민행정학 726페이지

㉔ 성과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실태,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 개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

㉕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제시한 항목에 따라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3년 주기로 자율평가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자율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

*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 2014 비타민행정학 314페이지

1. 양적 방법 : 인과관계의 발생정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얼마나 많이(how many) 있는가를 분석한다. 양적 방법은 이론과 가설이 원인·결과의 순서에 따라 검증되는 연역적 과정을 거치며 진실형, 준실형, 비실형 중 하나를 채택하게 된다.

2. 질적 방법 : 인과관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비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해석적·창의적·개인적·서술적 접근을 하며 무엇이(what), 어떻게(how)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한다. 질적 방법은 구체적인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귀납적 과정을 거치며 개방식 질문과 깊이 있는 면접을 통하여 질적 자료들을 획득한다.

① 심층면담 : 정보제공자의 경험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② 집단면담 :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③ 참여자관찰 : 참여자가 일일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방식이다.

④ 투사법 : 응답자들이 답변을 주저하는 경우, 다른 사항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이다.

6.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③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④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해설 :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하향식 상위(meta) 평가이다. ①은 주의를 해야 한다. 2 이상 부처의 관련시책은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를 확립해야 효과성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평가의 대상사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특정평가 자체를 물어본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다.(2014 비타민행정학 324페이지) 답 :

①

② 특정 평가 - 2014 비타민행정학 324페이지

: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등에 대하여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7.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⑤ 고층적·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해설 : X이론은 전통적 관리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인간관으로서 하위욕구를 중시하는 반면, Y이론은 새로운 인간관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상위욕구를 중시하며 성장이론에 해당된다. ③ 목표에 의한 관리

체계의 구축은 Y이론의 인간관에 따른 관리전략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351페이지) 답 :

③

* X·Y이론적 인간관과 관리전략 - 2014 비타민 행정학 351페이지		
구 분	X이론(theory X)	Y이론(theory Y)
인간관	• 본질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다. • 야망이 없고 책임지기를 싫어한다. • 명령과 지시를 받으려 한다. • 자기중심적이며 조직목표에 무관심하다. • 문제해결에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동기유발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가능하다. •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다.	• 본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 책임 있는 일을 맡기를 원한다. •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 타인을 위하여 행동하기도 한다. • 문제해결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동기유발은 하위욕구와 상위욕구를 포함한 5가지의 모든 욕구에서 가능하다(고급욕구를 더 중시). • 자기발전을 원하고 변화를 추구한다.
관리전략	• 당근(유인)과 채찍(통제·감시) • 구체적 방안 : 직무의 엄격한 통제, 금전적 보상체계 강화, 권위주의적 리더십, 집권적 의사결정, 상부책임제 강화, 명령과 점검, 처벌의 위협, 관용과 설득으로 갈등회피 등	• 통합관리(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 • 구체적 방안 : 자아실현적 직무개선, 분권화와 권한위임, 민주적 리더십, 내부규제 및 통제 완화, <u>목표관리(MBO)</u> 등
문제점 및 주의사항	고급욕구의 충족을 원하는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동성·저항·책임회피 등을 야기시킨다.	• X이론적 타성에 젖은 구성원에게 Y이론적 전략을 사용하면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 따라서 무조건 Y이론적 관리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8.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해설 : 거래비용경제학은 조직들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조직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로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조직내부의 관리비용보다 클 경우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시장 대신에 계층적 기업 조직이 생긴다고 본다.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 오는 거래의 내부화가 효율적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거래비용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형성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조직으로의 통합은 내부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효과적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도 거래비용이 포함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거래비용경제학은 경제학 속성상 효율성만을 고려하므로 공공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372페이지) 답 : ②

9. 베버(M.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해설 : ③ 정치적 전문성이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 또는 전문능력에 의하여 충원된다.(2014 비타민행정학 395페이지) 답 : ③

⑦ 능력에 의한 채용 - 2014 비타민행정학 395페이지
 :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관료가 담당하며 관료의 채용은 세습이나 정실에 의하지 않고 기술적 전문성 또는 전문능력에 의하여 시험·자격증 등 기술적 기준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이러한 능력 중심의 채용은 공직에의 공정한 접근기회를 부여한다.

10. 조직문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 ② 문화강도적 접근방법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③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 ④ 상황론적 접근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해설 : ④ 상황론적 접근은 상황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높이는 특정한 문화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하는 것은 문화강도적 접근이다. ‘공통된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 등’은 문화이기 때문이다. 답 : ④

11. 최근 정부의 정부3.0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 ② 면대면 접촉은 시민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무원과 접촉하는 정부 1.0의 서비스제공방식이다. 정부 3.0은 유비쿼터스 정부를 토대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준다.(2014 비타민행정학 415, 480페이지) 답 : ②

* 정부 1.0, 2.0, 3.0 비교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 ·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 참여	능동적 공개 · 참여,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 패러다임	Web 1.0	Web 2.0	Web 3.0
정부형태	전통적 정부	전자 정부	유비쿼터스 정부

12.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④ 해당 직무에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해설 : ③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하여 일반행정이 양성을 중시하여 순환보직 등을 통하여 융통성있는 배치를 하므로 할거주의가 낮고 조정과 협조가 원활하다.(2104 비타민행정학 540페이지) 답 : ③

2. 계급제의 특징 - 2014 비타민행정학 540페이지

(2) 탄력적인 인사 운영

- ① 계급제 하에서는 일반행정을 중시하므로 전직(직렬 간 이동)과 전보(동일직급 내 보직 간 이동)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관리자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인사권의 재량이 커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용이하며, ㉡ 직원의 입장에서는 순환근무가 용이해지므로 경력개발의 기회를 넓혀 주며, ㉢ 조직의 입장에서는 순환보직 등 수평적 보직이동이 촉진되므로 부서 간 · 부처 간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 ② 그러나 직위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 계급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계급제는 합리적 인사행정을 저해하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자주 발생한다.

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해설 : ①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권익보호 및 신분보장 장치로서 징계, 강임, 면직, 직위해제 등이 대상이다. 따라서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승진탈락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고충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②는 감원대상으로서 당연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 요건에 해당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은 주의를 해야 한다. 권고사직은 형식상 임의퇴직의 한 유형이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의 성격을 띠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직위해제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뿐이며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강임은 조직사정으로 계급이 하향조정되는 제도로서 징계가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강등이 징계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534, 598, 599, 600페이지). 답 : ①

* 소청심사와 고충심사		
구 분	소청심사(1963년 도입)	고충심사(1981년 도입)
유사점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식적 제도	
법령근거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 상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서 범위 좁음)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범위 넓음)
내 용	법원을 대신하여 위 처분의 위법여부, 즉 적법성(適法性)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 ※ 불만이나 부당한 사항은 심사대상 제외	위 직무조건과 신상문제에 대한 부당 또는 불만 사항을 판단하여 시정해주는 정부의 배려적인 인적자원관리 기능
청 구	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청구가능	추상적·심리적 상태의 불만으로도 청구가능
청구기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정 없음
기 관	소청심사위원회(높은 독립성 요구)	고충심사위원회(상대적으로 낮은 독립성 요구)
결 정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결정기한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법적 구속력	강함(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약함(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4.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해설 : ①은 공개성원칙으로서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②는 사전의결원칙으로서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③은 회계연도를 경과하지 말라는 한정성원칙으로서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④는 계획의 원칙으로서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⑤는 정해진 목적을 변경하지 말라는 한정성원칙으로서 전통적 예산원칙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668, 669페이지) 답 : ④

1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해설 : 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4 비타민행정학 652페이지) 답 : ⑤

*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의 비교 - 2014 비타민행정학 652페이지			
구 분		예 산	법 률
성립절차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 의 기 한 범 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증액 및 신비목 설치 원칙적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
공 포		공포 불필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예산을 공고	공포로서 효력 발생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효 력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만 한정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개폐 불가	법률으로써 예산변경 불가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설 :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금전급부 의무)를 지는 행위로서 채무이행의 책임은 다음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지 지출권한까지 부

여하는 것은 아니다.(2014 비타민행정학 757페이지) 답 : ⑤

③ 특 징 - 2014 비타민행정학 757페이지

㉠ 지출 시 별도 의결 :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한 것이며 지출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지출을 하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7.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 ① 과년도 지출
-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③ 여비
-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해설 : 긴급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①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긴급배정과 무관하다.(2014 비타민행정학 760페이지) 답 : ①

㉡ 긴급배정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 2014 비타민행정학 760페이지

➡ 긴급배정경비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선박의 운영·수리에 소요되는 경비, ㉢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비, ㉥ 여비, ㉦ 경제활동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 재해복구사업 소요경비

18.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끼리 연결된 것은?

-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 ㉡, ㉤

해설 : ㉠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반면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ㅇ낳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권한이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 지방의회는 임시회 소집요구권(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광역 및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는 의장이나 의원이 제척되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014 비타민행정학 841~845) 답 : ⑤

19.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 ①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는 소환대상이 아니므로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주민소환이 제한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직접 참여방식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소청은 14일 이내에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872~875페이지) 답 : ②

④ 제한 - 2014 비타민행정학 873페이지

: 선출된 후 또는 임기종료 일정기간에는 정치적 이유로 의한 소환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행정적 안정을 도모

- ㉠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때
- ㉢ 해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20.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해설 : ⑤ 시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면 내부(결정)비용은 높지만 외부(집행)비용은 낮다. 즉 많이 참여하여 결정하므로 순응이 확보되므로 집행이 잘 이루어진다.(2014 비타민행정학 860페이지) 답 : ⑤

③ 시민의 순응과 집행의 촉진 - 2014 비타민행정학 860페이지

: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시민의 순응이 확보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촉진된다. ⇨ Buchanan과 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